

2025년 한국 대선과 선거무결성 인식 : 정치적 양극화와 제도적 신뢰의 균열*

임 성 학**

•요 약•

본 연구는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조기대선을 배경으로 한국 유권자들의 선거무결성 인식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1,101명을 대상으로 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선관위 불신 시 부정선거 인식이 5.8배 증가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대비 4.1배 높은 부정선거 인식을 보였다. 60대는 청년층 대비 약 70% 낮은 부정선거 인식을 나타내 세대간 신뢰 격차가 확인되었다. 특히 중도층조차 높은 부정선거 인식을 보여 담론의 광범위한 확산을 시사했다. 연구 결과는 선거관리기관의 신뢰성 강화가 민주주의 정당성 확보의 최우선 과제임을 보여준다.

주제어 : 선거무결성, 제도적 신뢰, 정치적 양극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부정인식

I. 서론

2025년 6월 3일, 한국은 매우 특별하고 충격적인 상황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치렀다. 이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로 인해 실시된 조기대선이었으며, 선거 과정과 그 이후 전개된 사건들은 한국 민주주의사에 전례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선거부정 의혹이 단순한 정치적 논란에 머물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조치의 명분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가 성숙했다고 여겨지던 한국에서 선거무결성에 대한 의혹이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도구로 전용되는 사

* 이 논문은 202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기초·보호학문 및 융복합 분야 R&D기반조성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었으며, 동시에 선거무결성 문제가 민주주의 존립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2025년 대선을 둘러싼 선거무결성 논란은 구체적이고 다층적인 양상을 보였다.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사전투표와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사전투표함 관리 부실, 투표자 명부 오류, 전산시스템 신뢰성에 대한 의문 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의혹들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득표율 격차를 근거로 선거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격차가 통계적으로 이상하다며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사전투표 자체를 거부하고 본투표에서만 투표하자는 운동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선거 당일과 개표 과정에서도 투표 절차의 공정성, 개표 과정의 투명성, 선거 관리의 독립성 등 선거 운영의 핵심 요소들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선거무결성은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확보되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정치 체제 전반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된다.¹⁾ 린즈(Linz)가 강조했듯이,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은 시민들로 하여금 제도적 경로를 통한 갈등 해결을 포기하게 만들고, 체제 밖의 급진적 행동이나 정치 참여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²⁾ 2025년 한국 대선에서 나타난 현상은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선거무결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행정적 효율성이나 제도적 개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권자의 인식 구조와 그 정치적 결과에 대한 통합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 제도적 신뢰, 정치적 양극화 등이 선거무결성 인식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선거 부정 의혹이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조치의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현실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선거무결성 인식의 결정요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학술적 관심을 넘어서서 긴급한 현실적 필요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2025년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 유권자들의 선거무결성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유권자들의 선거무결성 인식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가? 둘째, 선

1) Norris, Pippa, Strengthening Electoral Integr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2) Linz, Juan J., The Breakdown of Democratic Regimes: Crisis, Breakdown and Reequilibr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8.

관위, 사법부, 정당 등 제도적 신뢰는 선거부정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정치적 양극화가 선거부정 인식에 어떠한 분화된 양상을 보이는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기여를 시도한다. 첫째, 기존 연구가 단편적으로 다뤘던 제도적 신뢰, 정치적 양극화,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합적 분석틀에서 검토하여 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과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한다. 둘째,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각 요인의 독립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민주주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체제 정당성의 핵심이며, 따라서 선거무결성 인식은 단지 개인적 평가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좌우하는 정치적 지표라는 점에서 그 분석이 긴급하고도 필수적이다.

II. 문헌조사 및 방법론

본 장에서는 선거무결성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과 방법론에 대해 논의한다. 선거무결성 인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여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이어서 한국적 맥락에서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차별점을 밝히고,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연구 가설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연구방법론을 제시한다.

1. 선거무결성 인식의 이론적 기반

선거무결성(electoral integrity)은 현대 민주주의 정부의 초석이 되는 개념으로, 선거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정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 규범, 절차를 의미한다.³⁾ 노리스(Norris)에 따르면, 선거무결성은 궁극적으로 유권자의 선호와 요구가 선거 결과를 통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⁴⁾ 선거무결성 개념은 단순히 선거일 당일에 발생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선거 전 기간, 캠페인, 선거일, 그리고 선거 후 기간을 포함하는 전체 선거 주기(electoral cycle)에 걸쳐 적용되는 합

3) Callen, Michael, Clark C. Gibson, Danielle F. Jung, and James D. Long, "Improving Electoral Integrity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Journal of Experimental Political Science*, vol.3, no.1, 2016; Schnaudt, Christian, "Exit or Voice? Behavioral Implications of Electoral-Integrity Beliefs in Germany," *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 vol.64, no.1, 2023.

4) Norris, 앞의 책.

의된 국제 원칙과 보편적 기준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선거 과정의 무결성을 의심하는 선거 부정 주장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의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선거부정과 선거무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권자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즉 선거무결성 인식은 객관적인 선거 현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부상해왔다.⁵⁾ 선거무결성 인식은 민주적 거버넌스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선거 부정이 만연하거나 무결성이 부족하다고 인식될 경우 정치적 신뢰와 정당성을 훼손하고, 유권자 투표율 및 참여율을 저하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정권 불안정, 폭력, 심지어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⁶⁾

2. 선거무결성 인식의 결정요인

선거무결성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존 연구들은 승자/패자 효과(Winners/Losers effect), 정치적 정체성, 사회경제적 배경, 미디어 노출, 제도적 신뢰, 정치적 효능감 등 다양한 요인들을 선거무결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⁷⁾ 그러나 2025년 한국 대선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할 때 두 가지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도적 신뢰로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직접적 불신이 선거부정 의혹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적 신뢰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같은 선거 과정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본 절에서는 이 두 가지 주요 요인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경험적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1) 제도적 신뢰 이론

이스턴(Easton)의 정치적 지지 이론은 민주주의에서 정통성의 수준이 정부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여기는 시민의 비율에 달려 있다고 보고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는 정치 시스

5) Norris, Pippa, "The New Research Agenda Studying Electoral Integrity," Electoral Studies, vol.32, no.4, 2013a; Carreras, Miguel, and Yasemin repolu, "Trust in Elections, Vote Buying, and Turnout in Latin America," Electoral Studies, vol.32, no.4, 2013;

6) Norris, Pippa, "Does the World Agree about Standards of Electoral Integrity? Evidence for the Diffusion of Global Norms," Electoral Studies, vol.32, no.4, 2013b.

7) 이번 연구에는 선거무결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미디어 요인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선거부정 담론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확산되었다는 점에서 미디어 요인을 변수화해야 하지만 선거관련제도와 정치적 양극화 측면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선 제외되었다.

템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한다.⁸⁾ 특히 선거 관련 제도들에 대한 신뢰는 선거 결과의 인정과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신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노리스(Norris)의 선거무결성 이론은 선거관리기관, 정당, 사법부 등 선거 과정에 관여하는 핵심 제도들에 대한 신뢰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인식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⁹⁾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선거관리기관의 존재와 역할이 필수적이다.¹⁰⁾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신뢰는 선거무결성 인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확인된다.¹¹⁾ 유권자들은 선거무결성을 판단할 때 선거관리기관의 직접적인 활동과 기능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으로서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 정당 사무 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이는 우수한 선거관리기관으로 평가되어왔다. 2012년 대선 기준, 선관위에 대한 신뢰도는 71.4%로 다른 정치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¹²⁾ 이번 대선 전후 신뢰도는 많이 떨어졌다.

2) 정치적 양극화와 승자/패자효과

정치적 성향과 이념은 선거 공정성 인식에 강력하고 일관된 요인으로 분석된다.¹³⁾ 특정 정당 지지자들이 상대 정당 지지자들 대비 매우 높은 부정선거 인식을 보이는 것은 정치적 정체성이 객관적 사실 인식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준다. 이는 ‘동기화된 추론(motivated reasoning)’의 작동을 보여주며, 정치적 양극화가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현실 인식의 차이로까지 확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

8) Easton, David,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5.

9) Norris, Pippa, Why Electoral Integrity Matt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10) Pastor, Robert A., “The Role of Electoral Administration in Democratic Transitions: Implications for Policy and Research,” Democratization, vol.6, no.4, 1999; Bjornlund, Eric C. 2004. Beyond Free and Fair: Monitoring Elections and Building Democracy,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04; Elklit, Jørgen, and Andrew Reynolds, “Judging Elections and Election Management Quality by International Standards,” Representation, vol.41, no.3, 2001; Elklit, Jørgen, and Andrew Reynolds, “The Impact of Election Administration on the Legitimacy of Emerging Democracies: A New Comparative Politics Research Agenda,” Commonwealth & Comparative Politics, vol.40, no.2, 2002.

11) 조진만, 김용철, 조영호, 2015. “선거품질 평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 『의정연구』, 21권 1호, 2015.

12) 조진만 외, 앞의 논문.

13) Sances, Michael W., and Charles Stewart III, “Partisanship and Confidence in the Vote Count: Evidence from US National Election since 2000,” Electoral Studies, vol.40, 2015.

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정서적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으며,¹⁵⁾ 이러한 양극화 추세는 선거 부정 시비와 불복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선거 결과는 유권자의 선거무결성의 인식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인 승자/패자 효과 이론에 따르면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승리한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보다 선거무결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¹⁶⁾

3) 한국적 맥락에서의 선거무결성 연구

한국에서 선거무결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선거관리기관이나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다. 조영호 외는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를 과정과 결과의 관점에서 연구했으며,¹⁷⁾ 조진만 외는 유권자의 선거품질에 대한 인식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분석하였다.¹⁸⁾ 기존 연구들은 제도개혁이나 기관의 효율성 차원의 분석이 많았고, 유권자의 인식 차원에서 제도적 신뢰, 정치적 양극화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해¹⁹⁾ 이들을 통합한 연구가 필요하다.

승자/패자 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 선거의 맥락에서 선거무결성 인식은 시기별로 상이한 패턴을 보여왔다. 초기 민주화 이후인 2013년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승자/패자 효과가 관찰되어 패자 집단이 승자 집단에 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²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층

14) Kriska, Jessica, and Branislav Kovaik, "Post-Truth Era of Political Marketing: Manipulation Techniques and Their Impact on Public Opinion and Electoral Integrity in the USA," *Politické vedy*, vol.2, 2024.

15) 김기동, 이재목, 2021 "한국 유권자의 당파적 정체성과 정서적 양극화," 『한국정치학회보』, 55권 2호, 2021; 장승진, 서정규, 2019. "당파적 양극화의 이원적 구조: 정치적 정체성, 정책선호, 그리고 정치적 세련도," 『한국정당학회보』, 18권 3호, 2019.

16) Anderson, Christopher J., Andre Blais, Shaun Bowler, Todd Donovan, and Ola Listhaug, *Losers' Consent: Elections and Democratic Legitim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Birch, Sarah, "Electoral Institutions and Popular Confidence in Electoral Processes: A Cross-National Analysis," *Electoral Studies*, vol.27, no.2, 2008; Cantu, Francisco, and Omar Garcia-Ponce, "Partisan Losers' Effects: Perceptions of Electoral Integrity in Mexico," *Electoral Studies*, vol. 39, 2015; Nadeau, Richard, and Andre Blais, "Accepting the Election Outcome: The Effect of Participation on Losers' Consen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23, no.4, 1993.

17) 조영호, 조진만, 김용철, 2013,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 과정과 결과." 『한국정치학회보』, 47권 2호, 2013.

18) 조진만 외, 앞의 논문.

19) 이한수, "선거와 선거관리에 대한 유권자 의식 분석: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연구방법논총』, 2권 2호, 2017.

내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2024년 총선에서의 패배는 이러한 의혹을 크게 증폭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총선 패배 이후 과거 승리도 의심스럽고, 최근 패배는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소급적 의혹 확산의 측면이 강하다. 이는 승자/패자 효과가 단일 선거 단위가 아닌 연속된 선거 경험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2025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지지층의 높은 부정선거 인식은 최근 패배의 효과(2024년 총선)와 미래 불안(2025년 조기대선)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3. 연구 가설

위에서 살펴본 이론적 검토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만들었다:

가설 1 (제도적 신뢰 가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선거부정 인식이 낮을 것이다.

가설 2 (정치적 양극화와 승자/패자효과 가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거부정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보수 성향일수록 선거부정 인식이 높을 것이다.

가설 2-2: 야당(국민의힘) 지지자일수록 선거부정 인식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통합 가설): 제도적 신뢰의 효과는 정치적 성향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하게 유지될 것이다.

4. 연구방법론

1) 분석방법

선거무결성에 대한 인식은 주로 전문가 설문조사와 대중 인식 조사를 통해 측정된다.²¹⁾ 본 연구는 대중 인식 조사를 이용해 유권자들의 선거무결성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종속변수인 선거부정 인식에 대해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또는 ‘선거조작’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라고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이분형 변수로 채코딩하였다(0=그렇지 않다, 1=그렇다). 종속변수가 이분형 변수인 점을 고려하여 일반선형회귀분석 대신

20) 조영호 외, 앞의 논문.

21) Garnett, Holly Ann, and Toby S. James, “Cyber Elections in the Digital Age: Threats and Opportunities of Technology for Electoral Integrity,” *Election Law Journal: Rules, Politics, and Policy*, vol.19, no.2, 2020; Norris, Pippa, “The New Research Agenda Studying Electoral Integrity,” *Electoral Studies*, vol.32, no.4, 2013a.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적용한다.

2) 위계적 접근법의 적용

선거부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한다. 위계적 접근법은 이론적 근거에 따라 변수들을 단계별로 투입함으로써 각 변수군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적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3) 블록 구성 및 투입 순서

3단계 위계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Block 1: 기본 통제변수(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가구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다. 이러한 변수들은 정치적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들로, 후속 블록에서 투입되는 주요 변수들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먼저 통제할 필요가 있다.

Block 2: 주요 독립변수(제도적 신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 정당공천 과정에 대한 신뢰, 법원에 대한 신뢰를 제도적 신뢰의 변수로 삼았다. 이들 변수는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인 “제도적 신뢰가 높을수록 선거부정 인식이 낮아질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한 변수들이다.²²⁾

Block 3: 정치적 통제변수(정치성향) 이념성향과 정당지지 등 정치성향 변수들을 투입한다. 정치성향은 선거부정 인식을 강하게 예측하는 변수로 알려져 있어, 이를 통제한 후에도 제도적 신뢰의 효과가 유지되는지 확인함으로써 제도적 신뢰의 순수한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III. 결과

분석 대상은 총 1,509명 중 결측값을 제외한 1,101명(73.0%)이었으며, 가중치(WT)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²³⁾ 종속변수인 선거부정인식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32.4%(357명)

22) 제도적 신뢰를 살펴보기 위해 선관위, 정당, 법원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설문조사하였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선관위의 공정성’ 정도, 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의 공정성’ 정도, ‘법원의 공정성’ 정도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 중 ‘대체로 공정했다’와 ‘매우 공정했다’는 ‘공정’으로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와 ‘대체로 공정하지 않았다’는 ‘불공정으로 코딩해 분석했다’(모름/무응답은 결측치로 처리함).

가 선거부정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67.6%(744명)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는 상당한 수준의 선거부정 인식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1. 모델 적합도 및 진단

최종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값은 378.849(df=21, $p < .001$)로 모형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함이 확인되었다. Cox와 Snell R^2 는 .292, Nagelkerke R^2 는 .414로 모형이 종속변수 변량의 약 41.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정확도의 경우 80.5%로 나타나 모형의 예측력이 우수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민감도(sensitivity) 73.1%, 특이도(specificity) 84.2%로 균형잡힌 예측력을 보였다. 표준화 잔차의 절댓값이 2.5를 초과하는 극단값은 전체의 2.3%(25개)로 허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영향력 진단에서 Cook's D 값이 1을 초과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VIF (분산팽창지수) 값이 모든 변수에서 3.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Hosmer-Lemeshow 검정에서 카이제곱값이 18.960(df=8, $p = .015$)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모형 적합도에 일부 제약이 있음을 시사하나, 복잡한 위계적 모형과 큰 표본크기를 고려할 때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2.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모형별 설명력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1단계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만을 포함한 경우 Nagelkerke R^2 값은 .156으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전체 변량의 15.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제도적 신뢰 변수를 추가하자 Nagelkerke R^2 가 .312로 증가하여 설명력이 15.6%p 향상되었다. 이는 제도적 신뢰가 분석 모형의 설명력을 크게 높이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정치성향 변수를 추가했을 때, Nagelkerke R^2 는 .414로 다시 10.2%p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치성향이 독립적으로도 상당한 설명력을 지닌 변수임을 알 수 있다(통계분석 결과는 <표 1>을 참조).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영향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 대비 부정선거 인식이 다소 낮았으나($B = -.072$, $OR = .931$)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p = .670$). 이는 성별이 부정선거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청년층(18~29세) 대비 중장년층에서

23) 분석에 포함된 변수 중 모름/무응답의 경우 결측값으로 처리하였음.

부정선거 인식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60~69세 집단에서 가장 강한 억제효과를 보였으며($B=-1.178$, $OR=.308$, $p<.001$), 이는 청년층 대비 부정선거 인식이 약 69% 낮음을 의미한다. 50~59세 집단도 유의미한 억제효과를 보였다($B=-.657$, $OR=.519$, $p<.05$). 반면 30대, 40대, 70대 이상은 청년층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주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이 서울 대비 부정선거 인식이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제한적이었다. 대전/충청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B=.320$, $OR=1.378$) 유의하지 않았고($p=.183$), 부산/경남($B=-.350$, $OR=.704$, $p=.118$), 대구/경북($B=-.409$, $OR=.664$, $p=.113$), 광주/전라($B=-.162$, $OR=.851$, $p=.575$), 강원/제주($B=-.663$, $OR=.515$, $p=.128$)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지역별 차이가 부정선거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학력의 경우 고학력일수록 부정선거 인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B=-.313$, $OR=.731$) 통계적 유의성은 경계선상에 있었다($p=.098$). 이는 교육 수준이 선거무결성에 대한 비판적 사고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님을 보여준다. 가구소득 수준은 부정선거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053$, $OR=.948$, $p=.371$). 이는 경제적 지위가 선거무결성 인식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제도적 신뢰 변수의 차별적 영향

제도적 신뢰 변수들 중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만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선관위를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경우 부정선거 인식이 약 5.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1.765$, $OR=5.843$, $p<.001$, 95% CI: 3.85-8.88). 이는 본 연구에서 발견된 가장 강력한 효과이다.

반면 공천과정의 공정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향을 보였다($B=-.209$, $OR=.811$, $p=.270$). 공천과정을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부정선거 인식이 다소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정당 내부의 공천과정에 대한 인식이 전체 선거의 무결성 인식과는 분리되어 작용함을 의미한다. 법원의 공정성 역시 부정선거 인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041$, $OR=1.042$, $p=.838$). 법원을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더라도 부정선거 인식에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선거 무결성 인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정치성향의 강력하고 일관된 영향

정치성향 변수들은 선거부정 인식에 강력하고 일관된 영향을 미쳤다. 이념성향에서 중도($B=.876$, $OR=2.402$, $p<.001$)와 보수($B=.710$, $OR=2.034$, $p<.01$) 모두 진보 대비 부정선거 인식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도 성향자들의 부정선거 인식이 진보 대비 약 2.4배, 보수 성향자들은 약 2.0배 높았다.

지지정당 변수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대비 부정선거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B=1.422$, $OR=4.144$, $p<.001$, 95% CI: 2.78–6.19). 이는 당시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외정당 지지자들도 상대적으로 높은 부정선거 인식을 보였으나($B=.379$, $OR=1.461$) 통계적 유의성은 제한적이었다($p=.111$). 무당파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B=.224$, $OR=1.251$, $p=.271$).

주요 변수의 실질적 의미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관위 신뢰의 실질적 영향은 $OR=5.843$ 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부정선거 인식 확률을 484% 증가시킴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선관위를 신뢰하는 집단에서 부정선거 인식률이 20%라면, 불신하는 집단에서는 약 6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당지지 측면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의 $OR=4.144$ 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대비 314% 높은 부정선거 인식률을 의미한다. 민주당 지지자의 부정선거 인식률이 15%라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약 4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대 간 격차의 크기의 측면에서 60대의 $OR=.308$ 는 청년층 대비 부정선거 인식 확률이 약 1/3 수준임을 의미한다. 청년층의 부정선거 인식률이 45%라면, 60대는 약 15%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3. 연구 가설 검증 결과

가설 1 검증: 채택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선거부정 인식이 낮을 것이다”
선관위 불신 시 부정선거 인식이 5.8배 증가 ($p<.001$)

가설 2 검증: 부분 채택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거부정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부분 채택 - 보수 성향일수록 부정선거 인식 높음 ($OR=2.034$, $p<.01$)

하지만 중도 성향자가 가장 높은 인식을 보여 예상과 다른 패턴

가설 2-2: 채택 - 국민의힘 지지자의 부정선거 인식이 매우 높음 ($OR=4.144$, $p<.001$)

가설 3 검증: 채택

“제도적 신뢰의 효과는 정치적 성향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하게 유지될 것이다” 정치성향 통제 후에도 선관위 신뢰의 강력한 효과 유지 (OR=5.843)

추가로 변수간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제도적 신뢰와 정치성향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p>.05$). 이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의 효과가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즉, 보수든 진보든 선관위를 불신할 경우 부정선거 인식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4. 결과의 정치적 함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2025년 한국 대선을 둘러싼 선거무결성 논란의 구조적 특성과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함의를 다층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네 가지 핵심 발견은 향후 선거무결성 확보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부정선거 인식에 미치는 압도적 영향력(OR=5.843)은 선거관리기관이 민주주의 정당성의 핵심 축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이스턴의 정치적 지지 이론과²⁴⁾ 노리스(Norris)의 선거무결성 이론이 예측한 바와 정확히 일치한다.²⁵⁾ 선거관리기관은 유권자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기준점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전체 선거 과정에 대한 의구심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신뢰 수준에 따라 선거무결성 인식이 극적으로 달라진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는 제도적 설계의 우수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질적 신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OR=5.843이라는 효과크기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단순한 행정적 불만을 넘어서 체제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2020년 대선 이후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신뢰 하락과 그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신뢰는 단순히 기술적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 전반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민주주의 발전의 최우선

24) Easton, 앞의 책.

25) Norris, 2014, 앞의 책.

과제임을 확인해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매우 높은 부정선거 인식($OR=4.144$)은 정치적 정체성이 객관적 사실 인식에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동기화된 추론(motivated reasoning)'의 작동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클라이만과 하(Klayman & Ha)가 제시한 확증편향과²⁶⁾ 랏지와 테이버(Lodge & Taber)의 동기화된 추론 이론이²⁷⁾ 예측한 현상과 정확히 일치한다. 정치적 정체성이 강할수록 개인은 자신의 기존 신념을 지지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거부하거나 재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5년 대선의 맥락에서 이러한 현상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당시 정치적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극도로 양극화된 환경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정체성은 더욱 강화되고 경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탄핵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후속 선거 과정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동기가 더욱 강화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단순한 정책 선호의 차이를 넘어서 현실 인식의 근본적 분화로까지 진전되었음을 시사한다. 장승진과 서정규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는 정책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차원에서도 심화되고 있으며,²⁸⁾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양극화가 선거 과정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해준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중요한 위험 신호로, 정치적 갈등이 제도적 합의를 넘어서 인식론적 갈등으로 확산될 경우 민주적 거버넌스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령대별 분석에서 나타난 뚜렷한 패턴, 특히 60대의 청년층 대비 약 70% 낮은 부정선거 인식($OR=.308$)은 세대간 정치적 신뢰의 근본적 차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차이는 정치적 사회화 이론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60대를 중심으로 한 기성세대는 1980년대 민주화 과정을 직접 경험했거나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체감한 세대이다. 이들에게 현재의 민주적 선거제도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쟁취한 소중한 성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청년층은 이미 완성된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동시에 그 한계와 문제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청년층의 높은 부정선거 인식이 단순한 세대적 특성을 넘어서 미래

26) Klayman, Joshua, and Young-Won Ha, 1987. "Confirmation, Disconfirmation, and Information in Hypothesis Testing," *Psychological Review*, vol.94, no.2, 1987

27) Lodge, Milton, and Charles S. Taber, *The Rationalizing Vot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28) 장승진과 서정규, 앞의 논문.

민주주의 발전에 미칠 수 있는 장기적 영향이다. 정치적 효능감과 제도적 신뢰는 민주적 참여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높은 회의주의는 향후 투표참여 감소, 정치적 냉소주의 확산, 극단적 정치 대안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청년층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환경에서는 확증편향과 에코챔버 효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어 부정적 인식이 더욱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는 중도 성향자들조차 진보 성향자 대비 2.4배 높은 부정선거 인식을 보인다는 것이다(OR=2.402). 이는 부정선거 담론이 특정 정치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라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로지르는 광범위한 현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중도 성향자들은 극단적 정치 담론에 대해 상대적으로 면역성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2025년 대선의 경우 이러한 일반적 패턴이 깨졌다. 흥미로운 점은 중도 성향 집단의 선거부정 인식이 보수 집단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이다. 이는 기존의 '극단적 담론에 취약한 집단은 보수층'이라는 상식과는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중도'라고 규정한 집단은 정치적 무관심층이라기보다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과 회의적 태도를 가진 경우가 많다.²⁹⁾ 즉,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약한 대신 정치 제도와 관리 기구 전반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태도는 선거무결성 문제에서도 '보수-진보 진영 대립'과 무관하게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었을 수 있다. 한국 사회 구성 주체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중도층이 전반적인 제도 및 주요 주체들에 대해 낮은 신뢰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 중도층의 신뢰도가 보수층보다 낮게 나타났다.³⁰⁾

더구나 2025년 대선은 탄핵·조기선거라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확산된 담론이 '중도층'에게까지 파급되면서 보수층보다 더 강한 부정선거 인식을 나타내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중도층의 높은 선거부정 인식은 정치적 양극화의 전형적 설명틀을 넘어, 제도 불신과 정보 환경 변화가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도층의 높은 부정선거 인식은 민주주의 관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중도층은 전통적으로 정치적 안정화 세력 역할을 해왔으며, 극단적 정치 갈등을 완충하는 기능을 담당해왔다. 그런데 이들조차 선거 과정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다면, 정치적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29) 강원택, “한국정치에서 ‘주관적 중도’ 유권자의 특성과 의미: 2004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3권 4호, 2007.

30) 케이스탯, 2023. “경제 침체와 ‘사회적 신뢰’ 현황 분석,” 『Kstat Report』, 72호, 2023.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중간지대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민주적 합의 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표 1〉 선거부정 인식에 대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최종모형)

변수	회귀계수		Wald	유의확률	승산비(OR)
	B	표준오차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별(여성=1)	-0.072	0.168	0.181	0.67	0.931
연령(30-39세)	0.006	0.302		0.985	1.006
연령(40-49세)	-0.365	0.3	1.478	0.224	0.694
연령(50-59세)	-0.657	0.298	4.849	0.028*	0.519
연령(60-69세)	-1.178	0.309	14.549	<0.001***	0.308
연령(70세 이상)	-0.586	0.308	3.616	0.057	0.557
거주지역(인천/경기)	-0.121	0.24	0.255	0.613	0.886
거주지역(대전/충청)	0.32	0.297	1.16	0.281	1.378
거주지역(광주/전라)	0.064	0.347	0.033	0.855	1.066
거주지역(대구/경북)	-0.104	0.314	0.11	0.74	0.901
거주지역(부산/울산/경남)	-0.223	0.282	0.622	0.43	0.8
거주지역(강원/제주)	-0.293	0.48	0.372	0.542	0.746
학력	-0.313	0.189	2.743	0.098	0.731
가구소득	-0.053	0.06	0.801	0.371	0.948
제도적 신뢰 변수					
공천과정 공정성	-0.209	0.19	1.216	0.27	0.811
선관위 공정성	1.765	0.224	62.303	<0.001***	5.843
법원 공정성	0.041	0.2	0.042	0.838	1.042
정치성향 변수					
이념성향(중도)	0.876	0.237	13.663	<0.001***	2.402
이념성향(보수)	0.71	0.25	8.036	0.005**	2.034
지지정당(국민의힘)	1.422	0.236	36.15	<0.001***	4.144
지지정당(그외정당)	0.379	0.237	2.544	0.111	1.461
상수항	-1.019	0.631	2.603	0.107	0.361

주: 분석 대상: 1,101명 (전체 1,509명 중 73.0%)

*p<0.05, **p<0.01, ***p<0.001 (준거집단: 성별(남성), 연령(18~29세), 거주지역(서울), 이념성향(진보), 지지정당(더불어민주당), 가중치(WT) 적용)

IV. 결론

본 연구는 2025년 한국 대선을 중심으로 선거무결성에 대한 유권자 인식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조기대선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맥락에서 선거부정 의혹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까지 활용된 전례 없는 상황을 배경으로, 1,101명을 대상으로 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제도적 신뢰, 정치적 양극화, 세대 효과가 선거무결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선거무결성 인식의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선관위를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유권자들의 부정선거 인식이 신뢰하는 유권자들보다 5.8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모든 분석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정치적 양극화의 영향도 강력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부정선거 인식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보다 4.1배 높았고, 중도와 보수 성향자 모두 진보 대비 높은 인식을 보였다. 특히 중도 성향자들조차 높은 부정선거 인식을 보인 것은 이러한 담론이 특정 정치 진영을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세대간에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60대의 부정선거 인식이 청년층의 약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선거관리기관의 신뢰성 강화가 필요하다. 선관위 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 제고, 선거 기술에 대한 공개적 검증 시스템 구축, 개표 과정의 실시간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제도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정치적 양극화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선거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치권이 극단적 담론을 자제하며, 선거 결과 수용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대간 신뢰 격차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민주주의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세대간 정치적 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횡단면 조사의 특성상 인과관계를 확실히 규명하기 어렵다. 제도적 신뢰와 선거부정 인식 간의 관계가 일방향적인지, 상호 영향을 주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무결성 인식의 시간적 변화를 추적하는 종단적 패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선거 전-중-후 시기별 인식 변화를 분석하고, 어떤 사건들이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선거부정 인식은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정보 확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유튜브 시청 빈도, 소셜미디어 이용 행태 등 온라인 미디어 변수들을 포함하여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정보 환경 전반을 고려한 선거 신뢰 회복 전략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한국 대선을 둘러싼 선거무결성 논란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체제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다. 선거부정 의혹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활용된 전례 없는 사태는 선거무결성에 대한 유권자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신뢰가 민주주의 정당성의 핵심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민주주의 발전의 최우선 과제를 확인해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무결성에 대한 의구심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 검증과 투명한 소통을 통해 유권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길이다.

참고문헌

- 강원택, “한국정치에서 ‘주관적 중도’ 유권자의 특성과 의미: 2004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3권 4호, 2007.
- 김기동, 이재목, 2021, “한국 유권자의 당파적 정체성과 정서적 양극화,” 『한국정치학회보』, 55권 2호, 2021.
- 김용철, 조영호, “한국 대선의 민주적 품질: 다차원적 평가모델의 경험적 분석과 함의: 다차원적 평가모델의 경험적 분석과 함의,” 『한국정당학회보』, 12권 1호, 2013.
- 이한수, “선거와 선거관리에 대한 유권자 의식 분석: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연구방법논총』, 2권 2호, 2017.
- 장승진, 서정규, 2019. “당파적 양극화의 이원적 구조: 정치적 정체성, 정책선호, 그리고 정치적 세련도,” 『한국정당학회보』, 18권 3호, 2019.
- 조영호, 조진만, 김용철, 2013,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 과정과 결과.” 『한국정치학회보』, 47권 2호, 2013.
- 조진만, 김용철, 조영호, 2015. “선거품질 평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 『의정연구』, 21권 1호, 2015.
- 케이스탯, 2023. “경제 침체와 '사회적 신뢰' 현황 분석,” 『Kstat Report』, 72호, 2023.

- Anderson, Christopher J., Andre Blais, Shaun Bowler, Todd Donovan, and Ola Listhaug, *Losers' Consent: Elections and Democratic Legitim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Birch, Sarah, “Electoral Institutions and Popular Confidence in Electoral Processes: A Cross-National Analysis,” *Electoral Studies*, vol.27, no.2, 2008.
- Bjornlund, Eric C. 2004. *Beyond Free and Fair: Monitoring Elections and Building Democracy*,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04.
- Callen, Michael, Clark C. Gibson, Danielle F. Jung, and James D. Long, “Improving Electoral Integrity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Journal of Experimental Political Science*, vol.3, no.1, 2016.

- Cantu, Francisco, and Omar Garcia-Ponce, "Partisan Losers' Effects: Perceptions of Electoral Integrity in Mexico." *Electoral Studies*, vol. 39, 2015.
- Carreras, Miguel, and Yasemin repolu, "Trust in Elections, Vote Buying, and Turnout in Latin America," *Electoral Studies*, vol.32, no.4, 2013.
- Easton, David,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5.
- Elklit, Jørgen, and Andrew Reynolds, "Judging Elections and Election Management Quality by International Standards," *Representation*, vol.41, no.3, 2001.
- Elklit, Jørgen, and Andrew Reynolds, "The Impact of Election Administration on the Legitimacy of Emerging Democracies: A New Comparative Politics Research Agenda," *Commonwealth & Comparative Politics*, vol.40, no.2, 2002.
- Garnett, Holly Ann, and Toby S. James, "Cyber Elections in the Digital Age: Threats and Opportunities of Technology for Electoral Integrity," *Election Law Journal: Rules, Politics, and Policy*, vol.19, no.2, 2020.
- Klayman, Joshua, and Young-Won Ha, 1987. "Confirmation, Disconfirmation, and Information in Hypothesis Testing," *Psychological Review*, vol.94, no.2, 1987
- Križka, Jessica, and Branislav Kovaik, "Post-Truth Era of Political Marketing: Manipulation Techniques and Their Impact on Public Opinion and Electoral Integrity in the USA," *Politické vedy*, vol.2, 2024.
- Linz, Juan J., *The Breakdown of Democratic Regimes: Crisis, Breakdown and Reequilibr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8.
- Lodge, Milton, and Charles S. Taber, *The Rationalizing Vot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 Nadeau, Richard, and Andre Blais, "Accepting the Election Outcome: The Effect of Participation on Losers' Consen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23, no.4, 1993.
- Norris, Pippa, "The New Research Agenda Studying Electoral Integrity," *Electoral Studies*, vol.32, no.4, 2013a.
- Norris, Pippa, "Does the World Agree about Standards of Electoral Integrity? Evidence for the Diffusion of Global Norms," *Electoral Studies*, vol.32, no.4, 2013b.
- Norris, Pippa, *Why Electoral Integrity Matt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 Norris, Pippa, *Strengthening Electoral Integr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 Pastor, Robert A., "The Role of Electoral Administration in Democratic Transitions: Implications for Policy and Research," *Democratization*, vol.6, no.4, 1999.
- Sances, Michael W., and Charles Stewart III, "Partisanship and Confidence in the Vote Count: Evidence from US National Election since 2000," *Electoral Studies*, vol.40, 2015.
- Schnaudt, Christian, "Exit or Voice? Behavioral Implications of Electoral-Integrity Beliefs in Germany," *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 vol.64, no.1, 2023.

【 Abstract 】

Perceptions of Electoral Integrity in the 2025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 Political Polarization and the Crisis of Institutional Trust

Lim, Sunghack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electoral integrity perceptions among Korean voters in the context of the 2025 early presidential election following President Yoon Suk Yeol's impeachment. Using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1,101 respondents, the study finds that trust i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i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election fraud perceptions. Distrust in the NEC increases fraud perceptions by 5.8 times, while People Power Party supporters show 4.1 times higher fraud perceptions compared to Democratic Party supporters. A significant generational gap emerges, with voters in their 60s showing approximately 70% lower fraud perceptions than young adults. Notably, even moderate voters exhibit elevated fraud perceptions, indicating widespread discourse diffusion beyond partisan lines.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enhancing electoral management body credibility is paramount for democratic legitimacy, as fraud allegations were used to justify extraordinary measures including martial law declarations.

Key Words : Electoral Integrity, Institutional Trust, Political Polarization, Election Management Body, Election Fraud Perception

